

경제학원론으로 본 소득주도성장론*

안 국 신**

논문 초록

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세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경제학원론의 틀로 고찰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민간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민간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다른 아닌 케인스 IS-LM모형의 틀을 수용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LM모형은 총수요모형이다. 총공급 측면도 포함하는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증가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상승효과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S-LM모형은 단기모형으로 성장모형이 아니라는 단점도 가진다. 잘못된 용어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두 경제정책인 공정 경제와 혁신성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 주제어: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론, IS-LM모형, AD-AS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 E1, O0

투고 일자: 2019. 1. 1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9. 5. 20. 게재 확정 일자: 2019. 7. 26.

*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논문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mail: ksahnecon@gmail.com

I. 머리말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다. 출범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되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주 68시간 노동에서 52시간제로 단축, 공무원 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선의와 인본의 진정성이 두드러지는 좋은 정책 목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차부터의 현실은 정부가 표방하고 기대한 정책 목표와는 너무 동떨어지는 참담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가 종전의 30만 명 선에서 2018년에 10만 명 선으로 급감하고, 실업률이 근래에 최고를 기록한 것이 단적인 예다.¹⁾ 소득주도성장류의 경제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일찍이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었고, 학계에서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희대의 정책실험이다.

본고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정통 경제학원론으로 조명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경제학원론으로 풀어본 논의는 없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다른 무엇보다 경제학원론의 틀로 들여다볼 때 이론의 특징과 중대한 한계가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거시경제학원론의 틀에서 고찰한다. 먼저 소득주도성장론의 간명한 논리는 케인스 IS-LM모형(더 구체적으로는 케인스 단순모형으로 알려진 IS모형)의 틀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경제학원론은 IS-LM모형이 총수요(AD) 모형이고, 총공급(AS) 측면을 같이 감안하는 총수요-총공급모형이 거시경제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는 모형이라고 가르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총수요-총공급모형에서의 총공급 측면을 도외시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계와 다르고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은 정책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LM 모형은 단기 안정화정책을 다루는 모형일 뿐 성장모형도 아니다. 제Ⅲ장에서는 경제학원론을 넘어서는 분석방법으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복잡한 모형 설정에도 불구하고 총공급 측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1)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가 2015-2017년 기간 중 연 평균 27.6만 명 증가한 반면에 2018년에 9.7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의 실업률 3.8%는 2010년대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채 이론 없는 계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Ⅱ장에서 다룬 경제학원론의 모형을 확장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경제주체들의 기대, 이중노동시장, 개방경제 등을 감안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상정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도외시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추구한 목표를 포용적 성장으로 살리고, 그동안 말치레에 그친 혁신성장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Ⅴ장은 맺음말로 가름한다.

Ⅱ. 경제학원론의 틀에서 본 소득주도성장론

1. IS-LM모형과 소득주도성장론

세계적인 경제대침체가 오래 지속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임금주도성장모형(wage-led growth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어받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 theory)을 거시경제정책의 지침으로 사용해 왔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표 1〉 최저임금 상승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총수요 증가) → 생산 증가 → 투자 증가, 고용 증가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의 선순환이 일어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은 경제학원론 차원에서 수요에 의해 소득과 고용이 결정되는 케인스모형으로 수용할 수 있다. 위 선순환의 과정은 케인스모형에서 승수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연쇄과정의 첫 단계를 으레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나 세금의 감소로 시작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특성은 케인스모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 첫 단계를 정부소지지출의 증가나 세금의 감소 대신 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삼는다고 단순화할 수 있다.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케인스 IS-LM모형을 보자.

$$Y = C + I + G \quad (1)$$

$$C = C(Y - T) \quad (2)$$

$$I = I(R, Y, \cdot) \quad (3)$$

$$M/P = L(Y, R) \quad (4)$$

식 (1) 은 총수요 정의식이다. 총수요(Y)가 민간소비(C)와 투자(I)와 정부소비지출(G)로 구성된 폐쇄경제이다. 식 (2)의 (민간)소비함수는 국민소득에서 세금(T)을 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함수이다. 소비는 이자율(R)의 감소함수이기도 한데 편의상 생략하였다. 식 (3)에서 투자함수는 이자율(R)의 감소함수이고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며, 기업가의 미래 예상이나 동물적 야성 등의 기타 요인이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 (4)에서 실질화폐수요(M/P)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예상인플레이션율을 0%로 가정하여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같게 단순화시킨다.

외생변수는 재정정책수단인 정부지출(G)과 세금(T), 통화정책수단인 통화량(M)이다. 모형이 결정해야 할 내생변수는 국민소득(Y), 민간소비(C), 투자(I), 이자율(R)이다. 물가(P)를 내생변수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방정식이 4개에 내생변수(미지수)는 5개이다. 케인스 IS-LM모형은 물가를 외생변수로 가정하여 모형해의 불확정성을 해결한다. 식 (1) - (3)이 IS곡선을, 식 (4)가 LM곡선을 낳는다. 내생변수들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IS곡선과 LM곡선에 의해 생산물 총수요와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 전체 기업은 이 총수요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균형총생산이자 균형국민소득이 된다. 그러면 소비함수에서 소비가, 투자함수에서 투자가 결정된다.

참고로 위 기본거시모형의 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이 선형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C = a + b(Y - T) \quad (2)'$$

$$I = I_0 - cR + fY \quad (3)'$$

$$M/P = gY - hr \quad (4)'$$

나아가 $G = G_0$, $T = T_0$, $M = M_0$, $P = P_0$ 라 하자.

그러면 균형국민소득은
$$Y_E = \frac{1}{1-b-f+\frac{cg}{h}}[a+I_0+G_0-bT_0+\frac{c}{h}\frac{M_0}{P_0}]$$
이다.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하자. 그러면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위 모형 틀에서 한계소비상향(b)의 증가로 포착할 수 있다.²⁾ b 가 증가하면 소비와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소득과 총생산이 늘어난다. 총생산이 늘어나면 한편으로 고용량과 가계소득이 늘고 다른 한편으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 승수효과에 따라 <표 1>과 같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b 가 더 크게 증가하여 위 과정은 대폭 확대된다. 참고로 위 선형모형에서 b 의 증가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한계소비성향”승수)는

$$\frac{\Delta Y_E}{\Delta b} = \frac{1}{1-b-f+\frac{cg}{h}}[Y_E - T_0]$$

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가계소득의 증가와 총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소득채널 효과가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고, 이는 케인스 IS-LM모형³⁾으로 잘 설명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다른 아닌 케인스 IS-LM모형, 더 단순하게는 IS모형이다.

2. AD-AS모형과 소득주도성장론

경제학원론에서 IS-LM모형은 총수요(AD) 모형이며 가장 간단한 통합모형은 총공

2)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자본소득이 감소한다고 상정하고,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자본소득의 그것보다 크다고 가정해도 된다. 경제학원론에서 다루는 비교정태분석의 틀로는 노동소득의 증가가 자본소득의 감소와 같고 두 소득을 합친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노동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자의 한계소비성향이 자본소득자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커야 하고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그렇다.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제학원론에서 다루는 ‘1부문’거시모형의 틀로는 노동소득의 증가를 경제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의 상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단순화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충분히 대표할 수 없겠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적인 특성은 잘 포착한다.

3) 실제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금융시장의 역할을 도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케인스 단순모형이라 불리는 IS모형이다. 금융시장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선순환 흐름의 폭이 둔화된다.

급(AS) 측면과 결합시키는 AD-AS모형이라고 가르친다. 아무리 간단한 거시모형이라도 총공급 측면을 모형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논의는 총공급 측면을 모형에 도입해야 완전해진다. 총공급 측면을 도입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세 방정식 (5)~(7)을 추가하는 것이다.

$$Y = C + I + G \quad (1)$$

$$C = C(Y - T) \quad (2)$$

$$I = I(R, Y, \cdot) \quad (3)$$

$$M/P = L(Y, R) \quad (4)$$

$$Y = F(K, N) \quad (5)$$

$$W/P = dF/dN \quad (6)$$

$$N = N(W/P^e) \quad (7)$$

식 (5)는 총생산함수이다. 총공급은 한 나라의 자본스톡(K)과 고용량(N), 생산기술(F)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식 (6)은 노동수요방정식이다.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실질임금(W/P)과 같은 수준에서 기업이 노동을 수요함을 나타낸다. 식 (7)은 노동공급과 노동시장 균형조건을 녹인 방정식이다. 노동공급은 예상실질임금의 증가함수이다.

방정식 (5)와 (6)이 으레 비선형이기 때문에 경제학원론에서는 총수요-총공급이론을 수식 대신 두 곡선으로 축약시켜 균형을 풀어낸다. 방정식 (1)~(4)에서 총수요와 물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의 총수요곡선이 결정된다. 방정식 (5)~(7)에서 총공급과 물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총공급곡선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⁴⁾ 위 모형에서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얻는 전형적인 방법은 예상물가(P^e)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김대식·노영기·안국신·이종철, 2018, pp. 752-754).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이 만나 <그림 1>의 E_0 처럼 균형총생산과 균형물가가 결정된다. 균형총생산과 균형물가가 결정되면 나머

4) 총공급곡선은 특수한 경우에 수평선일 수 있다. 특수한 경우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기를 말하고 케인스영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특수한 경우에는 총공급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오직 이 특수한 경우에만 총수요만으로 총생산과 고용이 결정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공동으로 총생산과 고용, 물가를 결정한다고 경제학원론은 가르친다.

지 내생변수들도 관련 방정식에서 균형수준으로 결정된다.

이제 AD-AS 모형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하자. 그러면 <표 1>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총수요곡선으로 나타난다. 이 임금의 소득채널 외에 다른 채널이 가동된다. 기업비용을 상승시키는 임금의 비용채널효과가 그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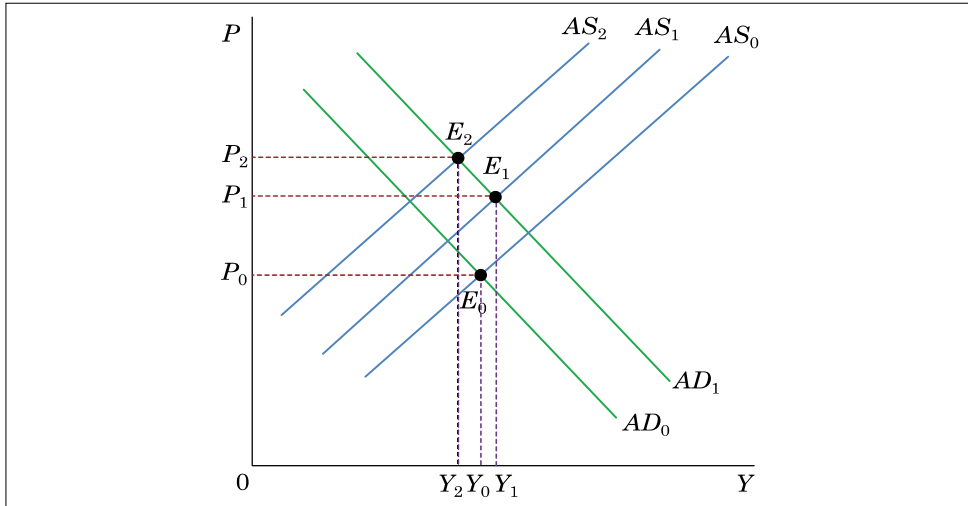
<표 2> 실질임금 상승 → 노동수요량 감소 → 고용 감소 → 생산 감소 → 가계소득 감소 → 소비 감소 → 생산 감소 →

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악순환의 시발은 위 거시모형의 식 (5)와 (6)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총공급곡선의 왼쪽(혹은 위쪽) 이동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악순환의 규모가 커지고 총공급곡선이 크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채널(수요증가) 효과도 있고 비용채널(비용증가, 공급감소) 효과도 있다. 즉,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물가는 확실히 오른다.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두 효과가 커져 물가가 더 크게 상승한다. 2018년에 피부로 느끼는 우리나라의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에 기인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는 가 줄어드는가는 수요증가효과와 비용증가효과 중 어느 효과가 크냐에 달려 있다. 어느 효과가 클까? 최저임금 인상이 완만하면 수요증가효과와 비용증가효과가 엇비슷하여 생산과 고용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수요증가효과가 비용증가효과보다 커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따라서 <그림 1>의 E_1 처럼 국민소득과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나가면 <그림 1>의 E_2 처럼 비용증가효과가 수요증가효과보다 커져 고용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거시경제학계의 통념이자 전통적 지혜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 상승을 가급적 억제하고자 한 것은 임금의 비용채널 논리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방식이다.

거시경제학계의 통념은 실증분석으로 뒷받침된다. Card and Krueger(1994)는 1992년에 미국 뉴저지 주에서 행한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18.8% 인상)을 연구해 최저임금이 외식산업의 고용을 줄이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으레 감소한다는 미시경제학의 전통적인 설명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행한 최저임금 인상 사례는 전통적 지혜를 확인시켜

〈그림 1〉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준다. 시애틀은 2015년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한 후, 2016년에 13달러로 또 올렸다. 이 사례를 외식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 분석한 워싱턴 대 연구(2017)에 따르면 2015년에는 고용이 줄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고용이 크게 줄어 저임금 노동자의 총노동소득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는 경우는 일회적으로 인상되는 경우와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며 통념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실상 문 정부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비율로 꾸준히 상승해 옴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로 급격하게 올리면 비용증가효과가 수요증가효과를 압도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과 고려도 없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내수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성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총수요-총공급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⁵⁾

5) 중앙일보, 〈박진홍의 인사이트, '소득주도성장 설계 홍장표 위원장'〉 인터뷰(2018. 12. 22.)에서 홍 위원장은 “많은 분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성장률이 확 올라가고 경제도 급세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한 듯 싶다”고 말했다. 수요-공급의 이론과 총수요-총공급의 이론에 익숙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그 ‘많은 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 경제학자들과 경제학원론을 배운 학생들은 〈그림 1〉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예측하는 새 균형점이 어디인지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송헌재·임현준·신우리(2018)는 우리나라 2010-2016년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이 미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의 노동시간과 월 급여를 감소시키고 정규직과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0-2016년은 최저임금이 연평균 6.1%로 상승한 기간이다. 16.4%나 오른 2018년을 포함하여 연평균 11.5% 오르는 2017-19년 기간을 추가하면 고용과 저소득층 소득에 미치는 부작용은 훨씬 커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근로시간의 단축도 유연한 보완장치가 동반된 완전한 단축이면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수요증가효과가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고용감소, 생산감소 효과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을 24%나 감축시키면서 선진국수준의 유연한 탄력근로제는 유예시킴으로써 총공급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총 수요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위 모형의 분석에 입각하여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다.

3. 소득주도성장론이 '성장'을 말하고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 케인스모형은 안정화정책을 논하면서 사용하는 단기모형이다. 경제가 자연생산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정부가 단기에 확장적인 재정, 통화, 복지정책을 써서 경기침체 갭을 메우고 주어진 자연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생산량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경제성장과는 무관한 단기적인 상황을 묘사한다. 성장은 생산요소의 부존과 생산기술 등 경제의 공급측면을 도외시하고 논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은 IS모형의 틀로 잘 묘사되는 만큼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증가를 다루는 단기모형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로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것은 용어의 심각한 오용이 아닐 수 없다.

4. 왜 '소득주도'성장인가?

국제기구에서 '임금주도'성장이라고 명명된 모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로 탈바꿈했을까? 일부 국내학자들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득 증대까지 염두에 두어 '임금주도성

장'(wage-led growth) 보다 폭넓게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경제학계에 없는 토종 용어를 창안한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여러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중소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는 병을 주고 한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아정자금이라는 약을 주는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소득 성장을 기대한다면 이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자영업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 자영업자 폐업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급격하게 높아진 노동비용이 많은 영세자영업자를 미시경제학원론에서 나오는 손익분기점 밑으로 떠밀어 넣었기 때문이다. OECD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높은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을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메뉴로 올리는 정책적 우를 더더욱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

5. 소득주도성장과 가격주도인플레이션?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말은 개별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다시 개별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말처럼 공허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학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수용될 가능성은 가격주도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못지않게 낮다. 경제학계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백안시되다시피 한 것은 경제상식에 반하는 잘못된 용어 탓이 크다. 임금소득주도성장을 줄여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명명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 또한 예컨대 서비스가격주도인플레이션을 줄여 가격주도인플레이션이라고 명명한다는 말처럼 어색한 설명이다.

경제학원론에서 다루는 기본거시모형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호전, 세계경기의 호전 등 경제의 기본여건이 좋아지는 결과로 임금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임금과 가계소득이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먼저 증가하면 임금과 가계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는 순환론에 빠져 있는 한계도 가진다.

6. 임금주도성장 vs. 이윤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의 모태를 이룬 임금주도성장을 보자. 문재인 정부는 종전의 우리나라 성장 방식이 기업이윤을 증대시켜 성장의 재원으로 삼는 이윤주도성장이었다고 규정한다. 이 방식에 따라 기대되는 낙수효과가 근래에 와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국내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임금(적어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임금주도성장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분법은 얼핏 명쾌하고 논리정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학원론에 부합하지 않는 진단이다.

국내의 실증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간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경제학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주도성장이 내세우는 임금의 대폭 인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비용의 대폭 상승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표 2>로 묘사한 공급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급감소효과 때문에 고용 감소(성장경제에서 고용 증가세의 둔화)라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반면에 이윤주도성장은 기업 비용의 상승이라는 공급감소효과가 없다. 따라서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7. 복지지출의 확대

복지지출의 확대는 위 모형에서 세금(T)을 순세금으로 해석하여 분석하면 된다. 세금에서 이전지출을 뺀 것이 순세금이다. 복지지출 = 이전지출을 확대하면 순세금이 감소한다. 순세금이 감소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여 민간소비가 늘어난다. 민간소비가 늘어나면 투자와 생산, 고용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표 1>의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할수록 선순환 효과는 커진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부족한 충수요를 확충하는 단기 재정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성장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의 공급측면에 기업비용의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상승과는 다르다. 후한 복지는 노동 공급의 감소를 통해 경제의 총공급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경제력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정적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오히려 후한 복지가 저소득층의 건강, 거주, 교육 등에 사용될 때 저소득층의 인적자본을 확충시킴으로서 장기에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

8.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용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소득주도 '성장'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도 아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임금주도성장을 내세운 것을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더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주류경제학계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용어이자 불완전한 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이 아니라 경제안정화와 복지를 다루는 정책론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함께 목표로 내걸었다.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이 주도하고 혁신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핵심정책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바람에 혁신성장이 응분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한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특히 정규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에 관해 문 정부는 매우 미온적이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로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단기에 가시적으로 추진할 만한 매력적인 정책으로 판단되었음 직하다. 혁신성장이 뒷전에 밀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전면에 부각된 이유다.

Ⅲ. 경제학원론 수준을 벗어난 소득주도성장론?

실제로 소득주도성장론은 위에서 다룬 케인스 IS-LM모형보다 복잡한 수식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경제학원론을 넘어서 전미분과 편미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중급거시경제학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배후에 있는 경제논리는 취약하다. 총공급 측면에 관한 합리적인 정식화나 응분의 고려가 없다는 한계는 그대로이다. 경제논리를 살려 경제학원론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외 논문 두 편으로 이를 살펴보자.

1. Stockhammer and Onaran(2012)의 임금주도성장모형

이 모형에서는 자본소득분배율(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소비와 투자수요의 설명변수로 들어간다. 폐쇄경제를 상정하고 위에서 다룬 단순한 케인스 IS모형의 틀로 살펴보면

$$C = C(Y - T, v), \quad C_2 > 0 \quad (2)''$$

$$I = I(R, Y, v), \quad I_3 < 0 \quad (3)''$$

로 표시할 수 있다. v 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v 가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는 감소한다. IS모형을 전미분하여 정리하면

$$(1 - C' - I_2 + I_1 L_1 / L_2) dY = -C' dT + dG + I_1 / L_2 d(M/P)$$

가 된다. 소비함수와 투자함수를 (2)''과 (3)''으로 사용하면 위 식은

$$(1 - C_1 - I_2 + I_1 L_1 / L_2) dY = -C_1 dT + dG + (C_2 + I_3) dv$$

로 바뀐다. 이 식에서 편도함수 $\partial Y / \partial v$ 는

$$\frac{\partial Y}{\partial v} = \frac{C_2 + I_3}{1 - C_1 - I_2 + I_1 L_1 / L_2}$$

이다. 저자들은 이 편도함수의 값이 양이면 임금주도성장, 음이면 이윤주도성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v = WL/PY$ 이기 때문에 v 를 재정정책수단이나 통화정책수단처럼 외생변수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v 는 내생변수인 고용량(L)과 국민소득(Y)과 물가(P)에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변수이다. 따라서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 (2)''과 (3)''에서 Y 와 R 을 v 의 함수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Y 와 R 이 v 의 어떤 함수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경제이론도 없다. 이 모형에서 경제의 총공급함수에

대한 정식화도 없다.

경제학원론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전미분이라는 수학적분석도구를 썼지만 이론 없는 미분 계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상 미분이라는 정태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다루는 데에 적합한 동태분석을 찾을 수 없다. 저자들이 정의한 임금주도성장 과 이윤주도성장이라는 개념도 자의적이고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제Ⅱ장에서 다룬 공급측면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모형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홍장표(2017)의 소득주도성장모형

이 논문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수준이 아니라 총수요 증가율과 총공급의 증가율이 같은 경우를 균형으로 상정한다.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이되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자본소득의 소비성향보다 크다. 투자는 자본소득분배율과 총생산의 승법적(multiplicative) 함수이다. 이런 단순화 가정 하에 총수요 증가율(\hat{y})을 다음과 같은 함수로 도출한다.

$$\hat{y} = a_0 + a_1(\hat{\omega} - \hat{\lambda}) \quad (8)$$

위 식에서 $\hat{\omega}$ 는 실질임금 증가율, $\hat{\lambda}$ 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고, a_1 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함수이다. 저자는 편도함수 $\partial \hat{y} / \partial \hat{\omega} = a_1$ 이 양이면 임금주도수요체제, 음이면 이윤주도수요체제라 부른다. 편도함수 $\partial \hat{y} / \partial \hat{\omega}$ 는 노동생산성 증가율($\hat{\omega}$)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상승할 때 총수요 증가율이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런 편도함수의 해석은 경제성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모형이 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중장기적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이 변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변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마련이다. 이런 상호작용의 동태분석이 없는 편도함수의 해석은 내용이 공허할 뿐이다.

실상 $\hat{\omega} - \hat{\lambda}$ 는 정의상 노동소득분배율 v 의 변화율이다.

$$v = \text{노동소득} / \text{국민소득} = 1 \text{인당 노동소득}(\omega) / \text{노동생산성}(\lambda) \text{ 이어서 } \hat{v} = \hat{\omega} - \hat{\lambda}$$

이기 때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총수요 증가율이 a_1 %p

증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율이 상승할 때 총수요 증가율이 양이면 임금 주도 수요체제라는 정의도 작위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주도수요체제,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면 이윤주도수요체제라고 정의하는 것이 차라리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총공급 증가율 방정식이다. 실제로는 총공급 증가율 방정식이 없다. Stockhammer and Onaran (2012) 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측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관계식이 없다. 제II장에서 다룬 IS모형의 단순한 동태화일 뿐이다. 다른 게 있다면 다음 식 (9) 와 같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총생산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함수로 상정하는 것이다.

$$\hat{\lambda} = b_0 + b_1 \hat{y} + b_2 \hat{\omega} \quad (9)$$

생산 증가율이 높아지면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신규 투자가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증가하면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이것이 위 식 정식화를 합리화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면 흔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질임금 상승률이 증가한다. 식 (9)에서처럼 생산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각각 내생 변수답게 독자적인 함수로 표시되어 단일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총공급함수의 동태 버전인 생산증가율이 자본, 노동, 기술진보 등의 함수로 표시되고, 실질임금 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별도의 함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총공급 측면(의 동태 버전)을 갖추지 못한 식 (9) 는 이른바 수요주도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 집착한 나머지 총공급 측면을 도외시킨 불완전한 모형이다.

홍장표는 식 (8) 과 (9) 를 풀어 편도함수 $\partial \hat{y} / \partial \hat{\omega}$ 와 $\partial \hat{\lambda} / \partial \hat{\omega}$ 의 부호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음을 보인다. 양자의 부호가 양이면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경제이론이 없이 자의적으로 방정식을 정식화하여 미분 계산한 것은 그 부호가 어떻게 나오든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한국경제 자료를 이용하여 부호가 양인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박정수(2017)가 보이는 것처럼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이다.⁶⁾

다른 임금주도성장모형들도 위 두 논문과 비슷하게 방정식의 정식화가 경제이론에 맞지 않거나 총공급 측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IV. 경제학원론의 틀에서 본 소득주도성장 : 확장

경제학원론을 벗어난 수학을 구사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을 다루었으므로 다시 경제학원론의 틀에서 논의를 해 보기로 하자.

1.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론에서 핵심적 명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비가 증가하여 소득과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의 확장적인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선순환은 비용상승효과에 의해 상쇄되고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수록 비용상승효과에 의한 부작용이 커진다는 것을 위에서 설명하였다. 경제주체들의 기대 요인을 고려하면 이 논의가 어떻게 될까? 기대 요인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

먼저 기업을 보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고용 축소, 자동화, 제품 가격 인상, 공장 해외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추구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이런 경향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위 대안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은 폐업한다.

이런 기업의 대응을 보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계의 소비심리는 위축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대가 일시적이라 인식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여력을 줄인다. 일시적인 소득 증대는 항상소득의 증대가 크지 않음을 뜻하고 소비는 항상소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비를 별로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린다.

이는 Lucas(1976)의 거시계량경제학 관행 비판과 연결된다. 경제환경이 밝지 않게 변한다고 소비자들이 예상함으로써 일정하다고 가정한 가계의 소비성향 자체가 낮아

6) 임금주도성장모형과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과 계량경제학적 실증분석은 박정수(2017)를 참고할 것.

저 소득 증가라는 승수효과가 낮아진다. 경제주체들은 변화하는 경제에 반응하여 기대를 조정하며 이런 기대의 조정과 이에 따른 행태의 변화로 경제를 다시 변화시킨다.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합리적인 대응을 감안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내세우는 수요증대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고 공급감소효과는 커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2018년 말부터는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가 호언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2019년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이 허언으로 귀착될 것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 이중노동시장과 고용 절벽

위에서 다룬 AD-AS모형은 동질적인 노동시장을 가정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크게 정규직시장과 비정규직시장으로 구분되는 이중노동시장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배에 달하는 소득을 받는다. 나아가 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4대보험 수혜율도 비정규직의 2배에 이르는 90% 안팎이다. 이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 노동시장은 앞의 AD-AS모형에서 노동수요가 기업의 이윤극대화행태에 의해 결정되는 방정식 (6)으로 묘사할 수 있다.

주휴시간과 기존의 편법적인 임금체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규직의 임금도 상승한다. 임금이 상승하면 정규직 노동수요량이 감소하여 정규직 고용이 감소한다(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정규직의 신규 고용이 감소한다). 정규직 고용이 감소하면 정규직을 구할 수 없는 노동력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옮겨간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도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이런 노동 공급의 증가와 노동 수요의 감소는 임금을 하락시킨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은 하락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정규직 시장처럼 노동수요가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면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대신 실업이 늘어난다. 노동시장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지거나 실업이 증가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일자리 경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소득분배의 개선 등과 역행한다. 이런 상황은 앞에서 다룬 경제주체들의 기대요인을 추가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8년에 주요경쟁국에서 없었던 고용 절벽을 우리나라가 경험한 이유이다.

3. 개방소국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지금까지 폐쇄경제를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개방소국경제이다. 개방경제에서는 순수출이 총수요의 구성항목으로 들어온다.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서 실질환율(EP^*/P , P^* 는 해외물가, E 는 명목환율, P 는 국내물가)의 증가함수, 국민소득의 감소함수이다. 위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았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환율이 하락한다.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 이는 총수요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더라도 개방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4. 다 같이 잘 사는 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정부가 추구하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는 IMF가 표방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족하다.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확충하되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력으로 절대빈곤을 퇴치할 수 있고 퇴치해야 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보편복지에 집착하여 일부 국민이 아주 못 사는 절대빈곤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큰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와 혁신, 노동개혁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컨센서스이다.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론이 무관심한 것도 또다른 문제점이다. 규제 완화 문제는 최근 주한 유럽상임대표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독특한 갈라파고스의 규제 국가”라 지적한 것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인적·물적·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역동적인 개방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동떨어지게 뒤흔쳐서는 안 된다. 혁신이 장기적 경제성장의 원천이고 혁신을 위한 사회하부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원론적인 명제다. 노동개혁의 중요성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경제학계의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실행해야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5. 수요주도성장 vs. 공급주도성장

논쟁적인 임금주도성장론과 그 변형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총수요 측면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고 봄으로써 총공급 측면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고 보는 전통 경제학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총수요는 물론 총생산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기와 2008년 이후에 일어난 세계적인 대침체기 같은 때에는 생산능력과 총공급이 부족하여 성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가 부족하여 성장이 부진한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총수요가 성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일상적인 때 총공급이 으레 성장을 주도한다. 케인스가 강조한 기업가의 동물적 직감과 슈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이것들은 총공급과 직결된다. 비근한 예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 폰을 개발한 이후 스마트 폰과 관련 산업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혁신에 의한 파급효과이고 공급주도성장이다. 잠재적 수요를 실현시키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혁신이고 기업가정신이다. 전통경제학이 세이의 법칙에 정도되어 총수요 측면을 너무 경시했다는 문제의식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총공급 측면을 무시하고 총수요 측면이 성장을 주도한다고 보는 임금주도성장론의 모형 설정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원론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은 다 같이 중요하되 장기에 성장은 공급 측면에 의해 주도된다.

V. 맺음말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시경제학원론이 가르치는 이론과는 다른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석한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평가해 보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케인스 IS-LM모형의 틀로 묘사되는 단기모형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장기 경제성장모형의 틀에 맞출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 배후의 논리는 단기에 소득 부조와 복지 확충을 통해 자연생산량 수준을 밀도는 경제침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장기에 자연생산량 수준 자체를 늘리는 경제성장과는 관련이 없는 모형이다. ‘성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경제학원론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작명이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은 가격주도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처럼 동어반복의 잘못된 용어이다. 게다가 단기적인 경제현상마저 AD-AS모형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AD모형인 IS-LM

모형(혹은 더 단순한 IS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하고 잘못된 분석과 정책 처방을 내놓았다. 기본개념마저 미비하여 경제학계에서 외면 받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폐기하고 OECD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의 용어와 대의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포괄적이되 효율적인 복지정책은 포용적 성장의 이름으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라면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의 옛날 성장정책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각을 세워 온 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역지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중소기업 및 내수산업 중심의 성장에 친화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본격적인 성장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름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 가한 충격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격한 실험이었다. 이런 과격한 실험이 세계경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2018년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고용절벽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좀 과장된 표현을 빌린다면 “지옥에 이르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서양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해프닝이라 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사용한 ‘창조경제’라는 생경한 용어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용어를 내세움으로써 한국경제학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주체적인’ 이론을 표방하고 내놓은 정책/정책명이 경제학원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면서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경제위기에 대해 제대로 경고하지 못하는 경제학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미시와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일깨워준다. 특히 이념이 경제학원론을 도외시할 때 경제현실이 선의의 정책을 외면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참 고 문 헌

1. 김대식·노영기·안국신·이종철, 『현대경제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8.
2. 박정수, “소득성장론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서강대학교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2017. 11.
3. 송헌재·임현준·신우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2018-41호, 한국은행, 2018.
4. 홍장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

- 발전연구』, 한국경제발전학회, 2014. 12, pp.67-97.
5.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보도자료, 2019. 1.
 6. Card D. and A. Kreuger, "Minimum Wage &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94, pp.772-793.
 7. Ekaterina J., M. Long, R. Plotnick, E. Inwegen, J. Vigdor and H. Wething (워싱턴 대학 연구팀), "Minimum Wage Increase, Wages, and Low-Wage Employment : Evidence from Seattle,"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23532, 2017.
 8. Lucas R. E., "Econometric Policy Evaluation : A Critiqu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Supplementary Series 1, 1976, pp.19-46.
 9. Stockhammer E. and O. Onaran, "Wage-led Growth : Theory, Evidence, Policy,"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 30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Nov. 2012.

Income-led Growth Model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s of Economics

Kookshin Ahn*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model"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s of Economics. It argues that both the characteristics and severe limitation of the income-led growth model can best be explained by the Keynesian IS-LM model. The IS-LM model is an aggregate demand model which ignores the aggregate supply side. Hence, the income-led growth model does not take into account of adverse aggregate supply effects of the abrupt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Since the IS-LM model is a short-run model it can not properly address economic growth. The so-called "income-led growth (model)" is a misnomer. The misleading and awkward terminology should be discarded. The wide-used terminology "inclusive growth" will suffice. The minimum wage increase should be moderated.

Key Words: wage-led growth, income-led growth model, IS-LM model, AD-AS model

JEL Classification: A1, E1, O0

Received: Jan. 12, 2019. Revised: May 20, 2019. Accepted: July 26, 2019.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Korea, e-mail: ksahnecon@gmail.com